

지방자치단체 주민제안 플랫폼 설계 분석

: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Residents' Suggestion Platforms of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17 Metropolitan Councils

김 지 수**·정 지 용***
Jisoo Kim·Ji-yong Jung

■ 목 차 ■

- I. 서론
- II. 온라인 주민제안 플랫폼 분석기준의 개발
- III. 분석대상 및 방법
- IV. 사례분석결과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제안 플랫폼에 대한 분석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17개 광역자치단체 사례에 적용·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정부유형, 전자민주주의유형, 시민참여유형 등 온라인 주민참여에 관한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분석 틀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틀은 전통적인 전자정부 평가 기준을 넘어 속의형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다음으로 개발된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전통형-과도기형-속의민주주의형' 중 전통형에 해당되는 주민제안 플랫폼은 없었으며, 대체로 과도기형과 속의민주주의형으로 이원화되었다. 주민제안 플랫폼은 타 주민참여 플랫폼과 달리 플랫폼 내에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속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과도기형 주민제안 플랫폼을 속의민주주의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년 기본과제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플랫폼 개선방안 연구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구 중 일부를 수정·발전시켜서 작성한 것입니다.

** 제1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로

논문 접수일: 2022. 11. 10. 심사기간: 2022. 11. 10. ~ 2022. 11. 28. 게재확정일: 2022. 11. 28.

□ 주제어: 시민참여, 국민제안, 주민제안, 플랫폼 정부, 전자정부, 속의민주주의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alysis criteria for residents' suggestion platforms and to apply them in the analysi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Thus, an analysis framework was formulated by reviewing major theories and prior research on online resident participation, including the e-government type, the electronic democracy type, and the citizen participation type. Such analysis framework goes beyond evaluation criteria for the traditional e-government and provides the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a deliberative-type resident participation platform has been establish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analysis framework, we found that there was no traditional-type residents' suggestion platform among the "traditional type - transitional type - deliberative democracy type." They were primarily divided into the transitional type and the deliberative democracy type. Unlike other resident participation platforms, the residents' suggestion platform is dependent on the residents' leadership and deliberation;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ward developing the transitional residents' suggestion platform into the deliberative democracy type.

□ Keywords: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Suggestion, Residents' Suggestion, Platform Government, E-government, Deliberative Democracy

I. 서론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사회를 경험하면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근로·생필품구매는 물론 문화·대인관계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까지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고, 그에 필요한 전자기기의 보급 역시 확대되었다. 특히 정부는 20세기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해 왔지만,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전히 오프라인 행정서비스를 기본으로 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의 경우,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여전히 장시간의 면대면(face-to-face)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 그 결과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사회는 한동안 활성화되었던 주민참여의 침체기가 되기도 했다. 마을공동체·주민자치회·주민토론회·주민참여예산·공론화위원회 등 대표적인 주민참여가 코로나 종료시까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OO구청 공무원 면담 결과, 2020).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일부 화상회의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활용한 지역이 있지만 기존 참여자들 간의 소통방식으로 활용되었을 뿐 일반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활성화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전남일보, 2020).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제안 플랫폼(platform)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decision making process)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제안 플랫폼의 설계가 플랫폼 내에서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기준을 개발하고, 광역자치단체 주민제안 플랫폼의 운영실태를 진단·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숙의과정에 대한 분석은 주로 오프라인 공론화과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전자정부에 대한 전통적인 평가기준을 사용하였기에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실천 수준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이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전자정부유형별 주민참여의 형태 및 민주주의 유형, UN 전자참여지수, 플랫폼 정부에 대한 분석 기준 등을 종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제안 플랫폼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온라인 주민제안 플랫폼 분석기준의 개발

1. 전자정부의 유형별 주민참여

일반적으로 전자정부¹⁾는 정부업무의 전자화,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자정부는 전통적인 역할 외에도 주민의 참여와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전자정부법」 제17조).²⁾ 즉, 온라인 상의 시민참여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³⁾ 따라서 전자정부는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

전자민주주의는 본래 IT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나(Arterton, 1987),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전과 활용 보편화에 따라 설계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와 결합 될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예를 들어 Caldwell(2004)는 시민참여의 정도와 참여의 영향력이라는 2개의 축을 기준으로 전자정부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김선경, 2007 재인용). 즉, 주민이 정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만을 받는 수동적,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경우 주민의 참여도가 낮고 참여의 영향력도 낮은 전자적 관료모델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주민과 정부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고, 협력을 통해 시민의 견해가 정책형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고도의 참여수준을 보이는 경우 시민사회모델로 분류하였다. 또한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 등 비동시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만 되기 때문에 참여

1)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전자정부(e-government)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간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전자정부법 제2조 1.)”를 말한다.

2) 2010년 5월 5일 시행된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전부개정은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참여하여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현재까지 해당 조항은 그대로 남아 주민제안 플랫폼 운영의 주요 근거 조문이 되고 있다.

3) 이론적으로 전자정부의 영역은 전자적 행정관리(e-administration)와 전자적 민주주의(e-democracy)로 구분되며, 먼저 효율성과 능률성을 목적으로 한 전자적 행정관리(1단계)가 발전한 뒤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제공(2단계)을 거쳐 전자적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투명성 제고(3단계)로 나아간다(Bertelsmann Foundation, 2001; 윤상오, 2003; 한국전산원, 2004; 김선경, 2007).

의 영향력이 약한 경우 정보관리모델로, 정책토론펙이나 시민주도의 자발적인 여론공모, 온라인 기금마련, 전자투표 등을 통해 참여시민의 영향력은 가능하지만 참여가 제한적인 경우 대중민주주의 모델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전자정부의 유형은 각각의 유형이 추구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유형이 서로 다른데, 예를 들어 대중민주주의 모델은 개인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지만 스스로 이슈를 형성할 권리를 가지지는 못하는 국민투표적 민주주의와 연계되고, 시민사회모델은 다양한 이슈를 스스로 개발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등 시민이 주도하는 숙의민주주의와 연계된다.⁴⁾ 이에 비해 정보관리모델이나 전자적관료모델은 정부가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을 주민에게 위임받고 주민은 정부로부터 정부를 제공받거나 Q&A정도를 주고받는 수동적 참여 또는 비참여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와 연계된다.

따라서 전자정부유형은 어떻게 주민참여의 방식을 설계하는지에 따라 연계되는 전자민주주의의 유형도 달라지게 된다. 이를 뒤집어 보면,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형태와 유형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Chadwick(2003)은 전자민주주의 유형과 전자민주주의 유형 간 연계

참여의 영향력 주민의 참여도	약	강
약	전자적 관료모델 • 수동적,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 비동시성 •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제공 ▶ 비참여, 대의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모델 • 전략적, 상호작용 가능 • 동시성 • 온라인 기금마련, 정책토론펙, 전자투표 ▶ 국민투표적 민주주의
	정보관리모델 • 전술적,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 비동시성 • 온라인 질의-응답,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게시판, 온라인 여론조사 ▶ 소극적 참여, 대의민주주의	시민사회모델 • 협동적, 상호작용적 • 동시성 • 전자청원, 전자협약 및 정책심의, 시민의 견해가 정책형성에 직접적으로 반영, 시민이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정부에 요청 ▶ 숙의민주주의

주: Chadwick, 2003; 김선경, 2007 재인용을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것임

4) 특히 Dahlberg(2001)는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온라인 공간이 사이버 공론장으로서 합리적-비판적 숙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주민제안 플랫폼의 지향점과 분석기준의 개발

1) 주민제안 플랫폼의 지향점: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사회모델

주민참여 플랫폼의 다양한 유형 중 하나인 주민제안 플랫폼이 어떤 형태의 플랫폼을 지향하는지는 결국 주민제안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형태와 관련된다. 따라서 주민제안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보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주민제안 플랫폼의 근거법인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비교적 1998년으로 벌써 약 25년 전이지만, 동법에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관련 조문이 신설된 것은 2014년으로 법 제정 시기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뒤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에 대한 조문의 내용은 비교적 선언적인 차원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외관련하여 국민제안의 처리(제52조의2), 국민참여 창구의 설치 및 운영(제52조의3), 온라인 정책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제53조 온라인 정책토론) 등을 법제화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제안의 운영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국민제안규정」이 대대적으로 개정된 것은 2017년 전부개정을 통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제13조, 제25조)’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칙을 구체화한 시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가 주민참여 활성화 등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된 역사는 비교적 짧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처에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동법 제2조 1.)으로, 단순한 민원제기나 청원과는 명백한 차이를 가진다. 즉, 정부의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특성을 지닌다. 다만 국민제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시민참여의 수준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단순히 주민이 제안을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정부가 이를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제안, 토론, 투표, 평가 등 숙의민주주의 실천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반영한 방식으로 설계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의 내용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행정청에 따라 플랫폼의 구조와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 즉, 단순히 게시판 형태로 주민제안을 수렴하는 방식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민의 제안, 토론, 수정, 투표, 평가 등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정부의 채택과정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경우까지 참여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계의 방식에 따라 어떤 전자민주주의와 연계될 것인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게시판을 만들어 주민의 제안을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방식이라면 <표 1>의 전자정부 유형 중 정보관리모델로,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비해 숙의과정에 기반한 전자투표 등 숙의민주주의 절차가 결합된 형태라면 대중민주주의모델 또는 시민사회모델처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참여를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제안 플랫폼의 지향점은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사회모델이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분석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2> 국민제안 플랫폼에 관한 규정

조문번호(조문명)	조문내용
제13조 (국민제안의 보완·개선)	행정청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제25조 (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②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국민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출처: 국민제안규정

2) 주민제안 플랫폼 분석기준의 개발

주민제안 플랫폼에 대한 분석기준 개발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주민제안 플랫폼의 설계 및 운영방식이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둘째, 숙의민주주의적 관점의 전자적 주민참여 측정기준인 UNDESA(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전자참여지수(EPI), 셋째,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주민제안 플랫폼의 설계사례 등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란 웹2.0 기술을 활용한 구글, SNS기업, 유튜브 등 플랫폼 기반의 기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를 정부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통해 시작되었다(O'Reilly, 2011). 플랫폼 제공자는 정보의 생산자-소비자가 상호작용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방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Parker et al., 2016; 우윤석, 2017), 플랫폼 정부에서 정부의 역할은 바로 이 플랫폼 제공자의 역할과 일치한다. 즉, 민간 부문의 플랫폼과 비교할 때 정부의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자는 단지 플랫폼이라는 공간과 최소한의 규칙만을 제공하고, 참여와 활동, 콘텐츠와 서비스의 개발, 활용, 확산 등의 모든 역할은 플랫폼 이용자들의 몫으로 남는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오철호, 2012).

그러나 정부 플랫폼은 그 특성상 플랫폼 안에서 경제적 편익이 아닌 사회의 공공선(common good) 등과 같은 비교적 추상적인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단지 시민의 의견 개진이 가능한 게시판을 탑재한 정부 홈페이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오철호, 2012; 노규성, 2014; 신열, 2017).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Challenge.gov', 스페인의 디사이드마드리드 등과 같이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표결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의 실천이 가능하게 설계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이 운영되면서 어떻게해야 주민참여 플랫폼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참여하는 개개의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원자화된 개인이 자발적으로 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그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등 최소한의 역할에 머무른다. 따라서 주민참여 플랫폼 분석기준의 첫 번째는 주민과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다양한 개개의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된다.

다음으로 UNDESA의 전자참여지수(EPI)는 해당 기관이 2003년부터 실시한 글로벌 전자정부 조사(Global E-Government Survey)⁵⁾의 일부이다. 특히 2010년 정부가 단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되면서 전자참여지수(EPI)의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UNDESA, 2010).

그 결과 전자참여는 ICT기술을 통해 시민이 정책, 의사결정, 서비스 설계 및 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참여성, 수용성, 숙의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UNDESA, 2013). 이와 같은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정부가 공공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였다(UNDESA, 2014). 그 결과 ① 6개 정책영역(교육, 보건, 재정, 사회복지, 노동, 환경)별 정책·예산·법령 정보 제공, 관련 로우데이터 제공, 전자적 상담메커니즘의 운영, 전자 의사결정도구의 존재와 ② 2개 이상 언어로 된 정부 웹사이트 운영, ③ SNS 사용, ④ 온라인 포럼, 미디어, 여론조사, 투표, 청원, 공공정책의 숙의과정 운영 등이 주요 기준이 되었다(UNDESA, 2014). 즉,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공공정책에 관한 단순 제안을 하는 것을 넘어, 그에 대한 숙의, 표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을 하게 되었다.

5) 글로벌 전자정부조사는 크게 전자정부지수(E-Government Index, 이하 EGI)와 전자참여지수(EPI)로 구성되는데, 전자정부지수(EGI)가 주로 해당 국가의 전자정부 관련 인프라 구축 수준을 측정한 것이라면, 전자참여지수(EPI)는 주로 전자정보(e-information sharing), 전자상담(e-consultation), 전자의사결정(e-decision-making)을 측정하며 전자정부지수에 관한 보조지표로 사용되었다(UNDESA, 2003).

이후 2016년에는 제3의 민간영역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시민의 정부 접근 권한을 확대하였는지, 무료 Wifi를 통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 무료 접속 가능여부,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민소통, 시민이 현재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개방형 데이터를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 정책형성과정에서 여론 등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도구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온라인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전자참여를 요구하고 있다(UNDESA, 2016).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의 더 높은 수준의 시민참여를 요구하고자, 실시간 소통, 온라인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용자 피드백 제출가능여부, SNS 및 온라인 여론조사,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숙의과정 운영, 온라인 시민참여예산 및 전자투표, 전자참여계획에 대한 안내 등을 지표에 추가하였다(UNDESA, 2020).

따라서 전자참여지수(EPI)의 이와 같은 변화는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주민참여 플랫폼 분석기준으로서 첫째, 플랫폼이 구조적으로 숙의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둘째, 정보의 제공 방향이 정부↔주민, 주민↔주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셋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자참여지수는 주로 각 국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숙의과정을 운영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국의 주민제안 플랫폼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주민제안 플랫폼인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⁶⁾와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시는 ‘더 나은 레이카비크⁷⁾’, 브라질 국회의 ‘이데모크라시아⁸⁾’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숙의과정은 주로 일반주민의 자유로운 제안, 제안에 대한 다른 주민의 토론, 일정규모 이상 주민의 동의(지지)를 통해 정책아젠다로 부상, 이후 전자적 주민투표를 통한 정부정책반영 검토, 정책화 과정에 대한 공개 등을 공통된 특징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서울특별시와 빠띠 데모스가 데모스X(demosx.org)라는 오픈소스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한 대표사례가 서울시의 ‘민주주의서울’이라고 볼 수 있다.

3) 측정기준: 조작적 정의

앞서 선행연구 및 UNDESA의 전자참여지수(EPI), 해외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에서 주민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정부는 주민이

6) 디사이드마드리드, <http://decide.madrid.es>

7) 더 나은 레이카비크, <https://betrireykjavik.is/group/20237>

8) 이 데모크라시아, <https://edemocracia.camara.leg.br/>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 안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제안 온라인 플랫폼이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분석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즉, 행위자, 플랫폼 구조, 피드백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위자는 주민과 정부(플랫폼 운영주체자)로 구분된다.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의 참여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역시 규정하고 있어 단체 또는 집단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① 주민이 전문가 및 NGO단체, 이해관계자 및 집단화된 주민(예를 들면 해당 지자체 주민만 가능)만을 한정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② 이를 포함해 개인으로서 일반주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살펴보고, 주민에 대해 한정하지 않은 경우를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 플랫폼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정부(플랫폼 운영주체자)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국민참여규정」에서는 주민참여 플랫폼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 운영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제각기 정하고 있어, 지자체 내부에서는 운영기준에 대해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론의제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운영이 불투명한 경우 주민제안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그래서 ② 공론의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주체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었다면 숙의민주주의로서 실천되고 있는 주민참여 플랫폼으로 보았다.

둘째, 플랫폼 구조이다. 플랫폼 구조는 주민의 활동가능단계와 정보제공의 방향에 대해서이다. 먼저 주민의 활동가능단계를 살펴보면, ①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제시한 제안에 타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② 주민이 제안하고, 타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토론이 가능하거나 오프라인 공론장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제안을 제안자와 타 주민이 공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분하였다. 이에 대해 주민의 제안에 타 주민과의 소통과 숙의과정을 거쳐 의견이 함께 반영될 수 있는 플랫폼은 숙의민주주의형 플랫폼으로 보았다. ②에 해당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민이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고도화형 숙의민주주의 주민제안 플랫폼으로 보았으며, 1~2가지를 제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형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정보제공의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주민과 주민 간 제공하는 정보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지자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일방향의 정보제공과 맞춤형의 정보제공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방향의 정보제공은 주민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나 주민이 원하는 자료는 맞지만 내용만으로는 주민이 알

수 없는, 해석이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지자체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주민들이 제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가독하기 쉽게 2차적으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다음으로 주민과 주민 간의 정보제공도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주민과 주민이 서로 일방적인 정보제공만 하는 경우와 정보가 상호교환되면서 논의가 진행되는 방식이 있다. 즉,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댓글을 통해 의견이나 정보를 제시하고 이 의견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얻을 수 없다. 단지 의견을 제시한 자의 내용에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하더라도 댓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의견교환이라 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주민과 주민이 서로 상호교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시한 주민의 댓글에 대댓글이나 공감버튼을 통해 내용을 의견을 낼 수 있고, 댓글내용을 통해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① 정부가 주민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② 정부가 주민에게, 주민이 주민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③ 정부가 주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주민과 주민이 서로 양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았다. ①의 경우에 비해 ③의 경우를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 플랫폼으로 보았다.

셋째, 피드백 수준이다.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일반 주민에게 공개되는 단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① 주민이 제안한 제안의 제목 및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는지, ② 주민이 제안한 제안내용, 동의 및 추천수와 토론내용, 제안의 채택여부를 공개하고 있는지, ③ 주민이 제안한 제안내용, 동의 및 추천수와 토론내용, 제안의 수정 과정 및 제안의 채택여부와 정책화를 위한 정부의 내부 프로세스 진행단계까지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하였다. 주민이 제안한 내용과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 주민이 제안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정책화 되었고, 결과적으로 채택된 제안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이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보여줌으로서 숙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⁹⁾인 정보제공, 실제적 균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전 과정을 공개하고 채택 이후 정책화를 위한 정부의 절차도 공개하는 경우를 고도화형 숙의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주민제안 플랫폼 분석기준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3>과 같은 분석기준이 도출된다. 5개의 분석기준이 모두 세부기준 ①에 해당될 경우 전통적 주민참여플랫폼으로 사실상 비참여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분석기준에 따라 일부 분석기준에서는 세부기준①, 다른 일부 분석기준에서는 세부기준②에 해당될 경우 과도기형 주민제안 플랫폼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비해 5개의 분석기준이 모두 세부기준 ② 또는 ③에 해당되는 경우 숙의민주주의

9) Fishkin(1991)은 숙의의 주요 원칙으로 ① 정보제공, ② 실제적 균형, ③ 다양성, ④ 성실성, ⑤ 평등한 고려등을 제시하였다.

형 주민제안 플랫폼으로 보았는데, 특히 세부기준 ③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교적 고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표 3〉 주민제안 플랫폼 분석기준(개발안)

구분		분석기준	세부기준
행위자	주민	1) 주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① 전문가 및 NGO, 이해관계자 및 집단화된 주민 ② 전문가 및 NGO, 이해관계자 및 집단화된 주민, 개인으로서 일반주민 누구나
	정부 (플랫폼 운영주체)	2) 플랫폼 운영주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① 플랫폼 제공 + 룰셋팅(rule setting), 공론의제선정 기준이 운영주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 ② 플랫폼 제공 + 룰셋팅(rule setting), 공론의제선정 기준이 명확하고 운영주체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된 경우
플랫폼 구조		3) 주민은 플랫폼에서 어떤 단계의 활동까지 가능한가?	① 제안, 타주민의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예: 동의, 좋아요, 추천 등) ② 제안, 타주민의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예: 동의, 좋아요, 추천 등), 온라인 토론, 오프라인 공론장 결합, 제안의 공동 수정 중 3~4가지 ③ 제안, 타주민의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예: 동의, 좋아요, 추천 등), 온라인 토론, 오프라인 공론장 결합, 제안의 공동 수정
		4) 정보제공의 방향은 어떠한가?	① 정부→주민(일방향) ② 정부→주민(일방향), 주민→주민(일방향) ③ 정부→주민(맞춤형), 주민↔주민(양방향)
피드백수준		5) 어떤 단계까지 일반 주민에게 공개되는가?	① 주민 제안의 제목 및 내용 ② 주민제안의 내용, 동의/추천수 토론, 제안채택여부, ③ 주민제안의 내용, 동의/추천수 토론, 제안수정 과정 및 제안채택여부, 정책화를 위한 정부의 내부 프로세스 진행 단계

〈주민제안 플랫폼 유형화〉

전통적 주민제안 플랫폼	과도기형 주민제안 플랫폼	숙의민주주의형 주민제안 플랫폼	
		일반형	고도화형
1)-①	분석기준에 따라 전통적-숙의민주주의형 주민제안 플랫폼 특성이 혼합된 상태 (5개 기준별로 ①과 ②가 혼합)	1)-②	1)-②
2)-①		2)-②	2)-②
3)-①		3)-②	3)-③
4)-①		4)-②	4)-③
5)-①		5)-②	5)-③

Ⅲ. 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제안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각 기관의 대표홈페이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경우와 별도의 독립된 주민제안 플랫폼이 운영되는 경우로 유형화된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별도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은 14개로 각 지역과 관련된 명칭을 만들어 운영중인 12지역(민주주의서울, 강원톡톡, 바로소통광주 등)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연결하여 운영중인 5지역(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가 있다. 지역별 운영방식과 해당 플랫폼의 이름, 링크는 <부록 1>과 같다.

2. 사례분석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개발된 <표 3>의 분석기준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제안 플랫폼을 분석하고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분류함으로써 어떤 시도의 주민제안 플랫폼이 숙의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의 전자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17개 주민제안 플랫폼에 대한 다중사례 비교 분석이다(Yin, 2011).

사례분석의 결과 주민제안 플랫폼은 네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전통적 주민제안 플랫폼과 과도기형 주민제안 플랫폼, 숙의민주주의형 주민제안 플랫폼 일반형과 고도화형으로 명명된다.¹⁰⁾ 일반형과 고도화형을 분리한 이유는 사전분석 결과 기본적인 숙의민주주의 과정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플랫폼 중 일부는 다른 지역과 명확한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더 높은 수준의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별화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17개 주민제안 플랫폼이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상대적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도식화하기 위해서 세부기준의 번호(①~③)를 값(value)으로 환산할 경우, 전통적 주민제안 플랫폼은 합산점수 5점인 경우, 과도기적 주민제안 플랫폼은 합산점수 6~9점인 경우, 숙의형 주민제안 플랫폼 일반형은 합산점수 10점, 숙

¹⁰⁾ 숙의민주주의형 주민제안 플랫폼을 2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한 것은 3개 유형으로 개발된 분석기준을 17개 시도 주민제안 플랫폼에 1차 적용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숙의과정을 전자시스템으로 구현한 사례가 있어 이에 차등을 두기 위함이다.

의형 주민제안 플랫폼 고도화형은 합산점수 11~12점인 경우가 된다.

따라서 사례분석의 결과는 첫째, 5개 지표별 분석결과와 대표사례를 설명하고, 둘째, 합산 점수를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제안 플랫폼의 유형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IV. 사례분석결과

1. 분석기준별 결과

1) 행위자: 주민의 범위

플랫폼 이용이 가능한 주민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17개 시도 모두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고, 댓글 기능 역시 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시도 홈페이지 상의 온라인 참여창구와 달리, 특별히 주민만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문가나 NGO, 이해관계자 및 집단화 된 주민 등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 단지, 집단화 된 주민은 제안시 '신청인 구분'란에 개인인지 단체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인 경우 단체명을 작성,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주민제안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세부분석기준 ②에 해당되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중 '주민제안'이 가지는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표 4〉 주민의 범위 분석결과

구분	세부분석기준①	세부분석기준②
지역	없음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주: 지역명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

2) 행위자: 플랫폼 운영주체(정부)의 역할

「국민제안규정」을 살펴보면, 제안이 정책으로 채택되기까지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제안제

출-접수-제안심사-채택여부결정-정책반영“의 5단계로 구분되지만, 만약 제안이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제안 중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해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통해 해당 제안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3조). 구체적인 주민참여 플랫폼의 구조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에서 플랫폼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특히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뒤 이를 심사하는 과정을 설계할 때나 채택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보완·개선하는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룰세팅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주민제안이 5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을 때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수용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공론의제로 채택하는 반면, 1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을 때에는 자동으로 공론의제로 채택한다(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 숙의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되며, 주민은 이렇게 사전에 준비된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여, 제안과 숙의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분석결과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플랫폼운영의 주체로서 플랫폼 내의 룰을 셋팅하는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이다.

그러나 공론의제가 무엇이 되어 할지를 광역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하게 된다면 이는 숙의민주주의형 주민제안 플랫폼이라고 볼 수 없으며, 광역자치단체가 플랫폼 구축과 룰세팅이라는 최소한의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제형성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예시와 같이 공론의제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있다면, 숙의민주주의형 주민제안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주민제안 플랫폼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주민은 단지 제안을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역할만을 하게 되며, 이후의 과정은 지자체 내부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은 숙의민주주의형 주민제안 플랫폼이라고 볼 수 없다. 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지역은 이와 같은 이유로 숙의민주주의형 주민제안 플랫폼이 아니라고 보았다.

〈표 5〉 플랫폼 운영주체의 역할 분석결과

구분	세부분석기준①	세부분석기준②
지역	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주: 지역명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

3) 플랫폼 구조: 주민의 활동수준

온라인 주민제안 플랫폼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주민은 '제안자'와 '제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이하 타 주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안자는 온라인 주민제안 플랫폼 내에서 스스로가 만든 제안내용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타 주민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구축한 '공감' 누르기나 '찬성/반대' 선택, 댓글 기능을 통한 의견제출 등으로 참여를 시작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제안이 어떠한 조건 없이 바로 공론(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민제안 플랫폼에서 공론(토론)의제로 채택되기 위해 운영주체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타 주민에 의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 또는 '찬성'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단 제안이 공론의제가 되면, 타 주민들은 댓글 또는 '공감' 누르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온라인 토론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안자의 제안을 오프라인 공론화 절차를 거치게 하기도 한다. 또한 제안자가 온·오프라인 토론 과정을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최초의 제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이처럼 플랫폼 안에서 주민이 어떤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온라인 주민제안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주민제안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100개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제안 내용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의제로 채택한다. 온라인 토론장 안에서 제안자와 타 주민은 공감과 댓글, 댓글에 대한 대댓글을 통해 토론이 가능하며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또는 시민토론의제선정단과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제안의 경우, 온라인 토론과 오프라인 토론을 병행하기도 한다. 제안자는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의 제안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주민제안 플랫폼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공론의제로 채택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이를 통해 어느정도 다른 주민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채택했다(서울시 전화인터뷰, 2019).

〈표 6〉 주민제안 플랫폼의 ‘제안-토론-채택’ 구조 비교

지역	공론의제선정 조건	공론과정(주민토론)				토론결과도출방식		제안채택여부
		찬반 입장 표시	댓글로 의견 제시	댓글로 양방향 소통 가능여부	오프라인 공론장 결합가능여부	찬반비율만 집계	토론방의 논의를 반영한 제안의 수정, 보완 가능	채택의조건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50~100미만: 부서검토를 거쳐 공론의제로 채택 • 공감100이상: 공론의제로 채택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토론 공론자의 참여인원이 1,000명이 넘을시 시장이 답변함 • 찬반비율은 채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등록시 	○	○	X	X	○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50이상: 부서검토를 거쳐 정책반영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X	X	X	X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검토 및 결과 공개·실행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50이상: 찬반토론 의제 채택 	○	○	X	X	○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명 이상 참여자 중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제안심의위원회 상정 •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실행여부 및 방법 논의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X	X	X	X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검토 및 결과 공개·실행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50명 이상: 토론 의제 채택 	○	○	X	X	○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이상 토론 참여시 시민권익위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등록시 	○	○	X	X	○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50개이상: 부서검토 후 결정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100이상: 토론 의제 채택 	○	○	X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토론 공론자의 참여인원이 1,000명이 넘을시 시장이 답변함 • 찬반비율은 채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X	X	X	X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검토 및 결과 공개·실행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X	X	X	X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검토 및 결과 공개·실행

지역	공론의제선정 조건	공론과정(주민토론)				토론결과도출방식		제안채택여부
		찬반 입장 표시	댓글로 의견 제시	댓글로 양방향 소통 가능여부	오프라인 공론장 결합가능여부	찬반비율만 집계	토론방의 논의를 반영한 제안의 수정, 보완 가능	채택의조건
울산	• 공감200이상: 토론 의제 채택	○	○	X	X	○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토론 공론자의 참여인원이 1,000명이 넘을시 시장이 답변함 • 찬반비율은 채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
인천	• 해당사항 없음	X	X	X	X	X	X	• 부서 검토 및 결과 공개·실행
전남	• 공감30이상: 토론 의제 채택	○	○	X	X	○	X	• 100명이상 토론 참여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의 논의를 거쳐 결정
전북	• 공감수 20건 미만 또는 미채택제안: 내부심사를 통해 1차 대상을 선별하고 도민정책참여단의 설문 및 투표를 통해 최종대상선정	X	○	○	X	X	○	• 부서 검토 및 결과 공개·실행
제주	• 공감100이상을 받은 제안이 '스스로해결단'과 함께 해결방안을 등록한 제안	○	○	○	X	○	X	• 공감 500이상: 클라우드 펀딩, 정책제안, 공공사업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현
충북	• 해당사항 없음	X	X	X	X	X	X	• 부서 검토 및 결과 공개·실행
충남	• 공감50이상: 의제발굴회의에 상정 후 채택	○	○	X	X	X	X	• 부서 검토 및 결과 공개·실행

그러나 강원도나 대구광역시 등의 경우 제안자의 수가 많지 않고 제한없이 모든 제안이 토론 가능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달리,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표 7>과 같이 전반적으로 숙의민주주의형 주민제안플랫폼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댓글로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능이 없거나 온·오프라인 공론장과의 결합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토론방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차 제안을 수정보완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 등 고도화되는데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보았다.

대조적으로 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등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단지 제안과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만이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주민제안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 주민의 활동수준의 역할 분석결과

구분	세부분석기준①	세부분석기준②	세부분석기준③
지역	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주: 지역명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

4) 플랫폼 구조: 정보제공의 방향

숙의형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주민들이 제시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자체는 주민 요청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제안규정」에 따르면,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제25조).

‘제안’이 ‘토론’의 대상이 된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안내용과 관련 정보를 단순제공하는 방식(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을 넘어 주민 간 토론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가 있다면 주민이 그때그때 지자체에 요청하고 지자체가 그에 맞는 정보를 빠르게 가공하여 재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는 오프라인 공론장에서만 가능했다(서울, 대전).

제안자와 타 주민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나 참고자료, 실태조사 자료 등을 추가하여 토론장에 게시하면, 온라인

토론장 내에서 제안자와 타 주민은 해당 내용에 대해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댓글 또는 공감버튼을 눌러 의견을 제시한다(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 대전시소 홈페이지).

숙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제공이다.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주민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런 많은 내용을 재정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에 맞춰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토론하는 토론장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온라인 토론장 내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내용을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와 고도화형 숙의민주주의 주민제안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민과 주민의 의견 제시가 일방적인 경우를 일반형 숙의민주주의 주민제안 플랫폼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표 8>과 같이 분석되며, 대체로 숙의민주주의 일반형 플랫폼(②)에 해당되었다.

<표 8> 주민의 활동수준의 분석결과

구분	세부분석기준①	세부분석기준②	세부분석기준③
지역	-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주: 지역명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

5) 피드백수준

정부가 국민제안을 받는 이유는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정부시책에 반영하여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국민제안규정」 제1조). 플랫폼의 공개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하거나 토론한 내용 속에서 추후 다른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고, 일련의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직접 제안자로서 제안하는 경우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 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과 추후 지자체에서 정책화하기 위해 정부의 내부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단계까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숙의형 민주주의 플랫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은 제안의 채택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만 채택 이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의 경우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행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5단계(사업제안-부처별검토-사업숙성-정부예산안반영-국회확정)로 진행되는데, 제안자가 작성한 제안내용이 총 5단계 중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표시하여 보여준다. 이후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어느 부처에서 실행하고 있는지, 예산 및 집행액은 얼마인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공개하고 있다(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와 반대로 주민제안의 내용과 주민채택여부정도만 공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이용하는 지자체의 경우 토론과정이 없어 주민의 제안내용과 제안 추진상황, 실행여부, 타 주민의 댓글정도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제안의 내용, 동의/추천수, 토론내용, 제안수정과정 및 제안채택여부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다.

〈표 9〉 피드백수준 분석결과

구분	세부분석기준①	세부분석기준②	세부분석기준③
지역	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

주: 지역명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

6) 분석결과 종합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주민제안 플랫폼에 대해 3개 분야 5개 기준을 두고 분석한 결과, 온라인 내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숙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립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국민신문고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제안을 받고 있는 지자체는 국민신문고의 특성상 주민이 제안을 한 경우 주민들의 공감이나 동의와는 상관 없이 온라인 토론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도에서 답변을 하고 종료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 보다 나은 숙의형 민주주의 플랫폼에는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은 높은 수준에서의 숙의형 민주주

의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제안에 대해 깊이 타 주민 또는 정부가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제안내용을 수정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전적인 과정을 통해 정책제안을 완성한다. 피드백부분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주민제안이 채택이 되었고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간략하게 나타나 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해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이나 지역주민들의 관심부족 등은 한계로 나타난다.

〈표 10〉 분석결과

분석결과	1. 주민의 범위	2. 플랫폼 운영주체 역할	3. 주민의 활동범위	4. 정보제공 방향	5. 일반 주민 공개
①	-	경기, 경북, 부산, 세종, 인천, 충북	경기, 경북, 부산, 세종, 인천, 충북	-	경기, 경북, 부산, 세종, 인천, 충북
②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전북, 전남, 충남	경기, 강원, 경북,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전남, 제주, 충북, 충남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전북, 전남, 제주, 충남
③			서울	대전, 서울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제안 온라인 플랫폼은 비교적 숙의형 민주주의 플랫폼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서울, 대전, 강원,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플랫폼의 이용가능 정도나 역할, 활동기능범위, 정보제공의 방향 등은 각 지자체가 일치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에게 공개 가능 여부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안의 수정과정과 정부의 내부 프로세스 진행단계의 공개는 주민이 정책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이미 참여한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숙의형 플랫폼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미 최고수준의 공개를 하고 있으나, 몇 지자체에서는 진행 정도의 공개나 주민들의 댓글을 미공개하는 등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형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구분되어지는 경우에는 전통적 민주주의 플랫폼과 숙의형 민주주의 플랫폼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특히 국민신문고를 연계하여 주민 제안을 받고 있는 지자체(경기, 경북, 부산, 충북)가 과도기형에 지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국민신문고와 연계하고 있지 않고 독립적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플랫폼의 활동이 타 주민의 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수준에 머무르거나 정보제공이 정부에서 주민으로 일방

적이거나, 일반주민에게 공개되는 수준이 제한적인 경우(세종, 인천)에는 과도기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민주주의 플랫폼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의 제안을 듣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11〉 지역별 주민제안 플랫폼 유형화(종합)

지역	주민의 범위	플랫폼 운영주체	주민 활동기능	정보제공 방향	공개가능 정도	총점	유형
서울특별시	2	2	3	3	2	12	숙의형 (고도화형)
대전광역시	2	2	2	3	2	11	숙의형 (고도화형)
강원도	2	2	2	2	2	10	숙의형 (일반형)
경상남도	2	2	2	2	2	10	숙의형 (일반형)
광주광역시	2	2	2	2	2	10	숙의형 (일반형)
대구광역시	2	2	2	2	2	10	숙의형 (일반형)
울산광역시	2	2	2	2	2	10	숙의형 (일반형)
전라남도	2	2	2	2	2	10	숙의형 (일반형)
전라북도	2	2	2	2	2	10	숙의형 (일반형)
제주특별시	2	2	2	2	2	10	숙의형 (일반형)
충청남도	2	2	2	2	2	10	숙의형 (일반형)
경기도	2	1	1	2	1	7	과도기
경상북도	2	1	1	2	1	7	과도기
부산광역시	2	1	1	2	1	7	과도기
세종특별시	2	1	1	2	1	7	과도기
인천광역시	2	1	1	2	1	7	과도기
충청북도	2	1	1	2	1	7	과도기
평균	2	1.7	1.7	2.0	1.7	9.1	숙의형 (일반형)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제안 플랫폼이 플랫폼 내에서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주민제안 플랫폼의 실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주민 제안을 하는 적극적 행동을 통해 주민참여가 시작되는 '주민 제안제도'의 특성상 비교적 수동적인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전통형 주민제안 플랫폼은 없었다. 그러나 민원과 달리 주민의 제안이 정부의 정책으로 발전되는 과정이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얼마나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 살펴본다면, 숙의민주주의 고도화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모든 지자체가 숙의민주주의 고도화형에 해당 되는 주민제안 플랫폼을 만들면 이와 같은 한계는 금방 극복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함의와 후속연구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개별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예산으로 각기 독립적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은 플랫폼의 다양성을 통해 우수한 숙의민주주의형 플랫폼을 발전시켜나가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의 특성상 플랫폼 개발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부담을 지자체에게 부담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연결방식의 과도기형 주민제안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도화된 숙의민주주의 주민제안 플랫폼을 국가차원에서 제공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이용자들이 이용의 과정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토론과 토론결과의 반영을 통한 제안 공동개발, 공동사실확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요구하고, 시스템 운영자인 정부(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가능)가 이를 구현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 주민참여 플랫폼 개발을 위한 소스를 공유하는 시민단체 등도 나타나고 있는데,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그 시장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플랫폼의 구조와 설계는 플랫폼 내에서 숙의민주주의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따라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숙의민주주의형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에 개편한 강원도의 '강원톡톡'은 고도화된 숙의형 민주주의 플랫폼이지만, 현재까지 45개의 도민제안과 3개의 공감제안이 선정되었으며, 채택된 제안은 0개이다. 높은 수준의 숙의형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활용이 확산될 수록 플랫폼의 수준도 함께 발전되기 때문에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분석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제안 플랫폼 외의 다양한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방식의 대면접촉이 많은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의정모니터단 등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 플랫폼 결합방식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편적으로 주민이 공감이나 추천, 좋아요, 댓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화상회의 등 온라인 속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통한 정책 방향의 수정과 보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분석기준 개발 및 적용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기초지자체 주민제안 플랫폼에 대한 연구, 주민제안 외 다양한 주민참여 플랫폼에 대한 연구, 온-오프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간 연계에 관한 연구, 참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연구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UNDESA. (2003). E-Government Survey 2003. UNDESA.
- UNDESA. (2004). E-Government Survey 2004. UNDESA.
- UNDESA. (2008). E-Government Survey 2008. UNDESA.
- UNDESA. (2010). E-Government Survey 2010. UNDESA.
- UNDESA. (2013). E-Government Survey 2013. UNDESA.
- UNDESA. (2014). E-Government Survey 2014. UNDESA.
- UNDESA. (2016). E-Government Survey 2016. UNDESA.
- UNDESA. (2020). E-Government Survey 2020. UNDESA.
- 김선경. (2007). 전자적 시민참여 단계의 분석모형 구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0(1): 33-60.
- 노규성. (2014).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Communication Books.
- 신열. (2017). 정부혁신관점에서 정부 3.0 정책의 성과분석: 우수-미흡기관 담당자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7(3): 107-127.
- 오철호. (2017). 문제제기: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의 연구와 적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2): 155-167.
- 우윤석. (2017). 플랫폼 기반 중기정책관리의 개념적 이해와 변화모형의 탐색.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 17-59.
- 윤상오. (200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1): 79-103.
- 한국전산원. (2004). 「e-Governance 구현을 위한 과제와 전략」.
- Arterton, F. C. (1987). *Teledemocracy: can technology protect democracy? (Vol. 165)*. SAGE Publications, Incorporated.
- Bertelsmann Foundation. (2002). *Balanced E-Government: E-Government-Connecting Efficient Administration and Responsive Democracy*.
- Caldow, Janet, (2004). *e-Democracy: Putting Down Global Roots*. IEG.
- Chadwick, A. (2003). Bringing e-democracy back in: Why it matters for future research on e-governance.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1(4): 443-455.
- Dahlberg, L. (2001). The Internet and democratic discourse: Exploring the prospects of online deliberative forums extending the public spher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4(4): 615-633.

- Fishkin, J. S. (2011). Why Deliberative Polling? Reply to Gleason. *Critical Review*, 23(3): 393-403.
- O'Reilly, T. (2011). Government as a Platform. *Innovations: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6(1): 13-40.
- Parker, G., Van Alstyne, M. W., & Jiang, X. (2016). *Platform ecosystems: How developers invert the firm*. Boston University Questrom School of Business Research Paper, (2861574).
- Yin, R. K. (2011). *Applications of case study research*. sage.
- Zimmerman, J. F. (1986). *Participatory democracy: Populism revived*. Praeger Publishers.

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32074호.

전자정부법. 법률 제18744호.

행정절차법. 법률 제16778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07호.)

강원도 주민제안 플랫폼(강원톡톡), <https://idea.gwd.go.kr>

경기도 주민제안 플랫폼(경기도의 소리), <https://vog.gg.go.kr>

경상남도 주민제안 플랫폼(도민참여플랫폼),

<https://www.gyeongnam.go.kr/gn1st/index.gyeong?contentsSid=3769>

경상북도 주민제안 플랫폼,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50&LARGE_CODE=720&MEDIUM_CODE=40&SMALL_CODE=40&

광주광역시 주민제안 플랫폼, (광주온), <https://barosotong.gwangju.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구광역시 주민제안 플랫폼(두드리소), <https://dudeuriso.daegu.go.kr>

대전광역시 주민제안 플랫폼(대전시소), <https://www.daejeon.go.kr/seesaw/index.do>

부산광역시 주민제안 플랫폼, <https://www.busan.go.kr/minwon/proguide>

서울특별시 주민제안 플랫폼(민주주의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제안 플랫폼(똑똑세종),

https://www.sejong.go.kr/citizen/sub02_01.do

울산광역시 주민제안 플랫폼(시민다듬이방),

<https://www.ulsan.go.kr/dadeumibang/index.do>

인천광역시 주민제안 플랫폼(인천은 소통이 가득),

<https://www.incheon.go.kr/cool/index>

전라남도 주민제안 플랫폼(소통인전남), <http://sotongin.jeonnam.go.kr>
전라북도 주민제안 플랫폼(전북소통대로), <https://policy.jb.go.kr>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제안 플랫폼(가치더함), <https://www.jejudsi.kr/index.htm>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president.go.kr>
충청남도 주민제안 플랫폼(만사형통충남), <https://10004.chungnam.go.kr>
충청북도 주민제안 플랫폼,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376>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주민제안 플랫폼(더 나은 레이카비크),
<https://betrireykjavik.is/group/20237>
스페인 마드리드 주민제안 플랫폼(디사이드마드리드), <http://decide.madrid.es>
브라질(이 데모크라시아), <https://edemocracia.camara.leg.br/>

김 지 수: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원자력 에너지 정책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프레임분석: 원전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2015)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지방행정, 지방분권, 시민참여 및 공론화, 갈등관리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공론화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인식분석: 서울-광주지역 주민을 중심으로(2020)”,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2020), “리더십이 공공봉사동기와 분배의 공정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지방 공무원 간 비교를 중심으로”(2020) 등이 있다(jisookim@krila.re.kr).

정 지 용: 경기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 석사학위(논문: 범죄의 기회와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에 관한 연구, 2013)를 취득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분야는 공공갈등관리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설문조건에 따른 지불의사 차이분석(2020), 리더십이 공공봉사동기와 분배의 공정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2020) 등이 있다(jjyong-2@hanmail.net).

〈부록 1〉 지역별 주민제안 플랫폼

지역	운영방식	플랫폼 이름	링크
강원도	별도 홈페이지 운영	강원톡톡	https://idea.gwd.go.kr
경기도	별도 홈페이지 운영	경기도의 소리	https://vog.gg.go.kr
경상남도	별도 홈페이지 운영	도민참여플랫폼	https://www.gyeongnam.go.kr/gn1st/index.gyeong?contentsSid=3769
경상북도	대표 홈페이지 내 설치	-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50&LARGE_CODE=720&MEDIUM_CODE=40&SMALL_CODE=40&
광주광역시	별도 홈페이지 운영	바로소통광주	https://barosotong.gwangju.go.kr
대구광역시	별도 홈페이지 운영	두드리소	https://dudeuriso.daegu.go.kr
대전광역시	별도 홈페이지 운영	대전시소	https://www.daejeon.go.kr/seesaw/index.do
부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 내 설치	-	https://www.busan.go.kr/minwon/proguide
서울특별시	별도 홈페이지 운영	민주주의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
세종특별자치시	별도 홈페이지 운영	똑똑세종	https://www.sejong.go.kr/citizen/sub02_01.do
울산광역시	별도 홈페이지 운영	시민다듬이방	https://www.ulsan.go.kr/dadeumibang/index.do
인천광역시	별도 홈페이지 운영	인천은 소통이 가득	https://www.incheon.go.kr/cool/index
전라남도	별도 홈페이지 운영	소통인전남	http://sotongin.jeonnam.go.kr
전라북도	별도 홈페이지 운영	전북소통대로	https://policy.jb.go.kr
제주특별자치도	별도 홈페이지 운영	가치더함	https://www.jejudsi.kr/index.htm
충청남도	별도 홈페이지 운영	만사형통충남	https://10004.chungnam.go.kr
충청북도	대표 홈페이지 내 설치	-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376

